



통합진보당

150-748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6 솔표빌딩 Tel 02-2139-7777 Fax 02-2139-7890 홈페이지 <http://goupp.org/>
담당부서 : 정책기획실(02-885-2306), 담당자 : 최기영실장(010-9300-8150), 이메일 : tongil4u@hanmail.net

문서번호 : 중앙 정책기획실 제12-12-03-03호

시행일자 : 2012년 12월 3일

수 신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제 목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의견>’회신의 건

-
1. 평소 저희 통합진보당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가 보내주신 ‘2012년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역사문제 공개질의서’에 대해 별첨과 같이 답변 자료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답변서는 저희 당의 총선공약에 기초해 작성되었으며, 대선공약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화할 것입니다.

별첨 1. 답변서 1부. 끝.

통합진보당 대표 강병기



※별첨

본 질문은 모두 4개 문항입니다. 귀하의 정견을 간단하게 밝혀주십시오.

질문
1

1939년 일제 징역거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만 7천명이 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갇혔고, 현재에도 약 800여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G20 회원국(32개국) 중 병역거부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유일한 국가로, 전세계 병역거부 수감자의 80% 이상이 한국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1950년 이래, 한국에서 2011년까지 병역거부로 수감된 이들의 형기를 모두 더하면 3천년이 넘고, 지금도 매년 수백명 이상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호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이며, 헌법으로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천명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으로서 매우 불행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2

유엔은 한국정부에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할 것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서두르라는 권고를 반복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는 8개국(프랑스, 독일, 헝가리, 폴란드, 스페인, 슬로바키아, 미국, 호주)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매번 '연구중'이라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이 유엔의 권고를 계속 무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정부는 일제 말기의 '여호와의 증인'들의 병역거부 행동은 독립운동으로 평가하면서,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그들의 같은 행동을 엄단하는 것은 국가의 권위와 가치를 스스로 모독하는 모순적인 처사인 것입니다. 국회 또한 2004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이 발의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등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와 국회의 행위 및 태도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군사대국, OECD 가입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답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3

병역거부자들은 무조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이들에게 대체복무제도(사회복무제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네,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복무제로 포용하는 조치는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병들의 복무환경과 인권상황이 크게 개선되는 계기가 되면서 오히려 군의 효율적 운영과 병역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방력이나 개병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아니라 불법, 탈법 그리고 권력형 병역기피자들일 것입니다.

질문
4
답변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체 복무제의 기간 독일 등 대체복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대체복무기간이 1.5배를 넘지 않으므로 우리도 현역 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1.5배의 기간을 복무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함께 노력해서 대체복무제를 제도화하고 또한 징벌적 성격이 아닌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